

월급쟁이 43% 한달 200만원도 못 번다

농어민·자영업 10명중 8명꼴...청년, 중장년층보다 못벌어 고용률 높은 시 지역은...서귀포>당진>나주>제주>영천 順

임금근로자 중 절반 수준이 한 달 월급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민과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10명중 8명이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라

면 전체 임금근로자 1977만9000명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비중은 43.0%였다. 100만원을 채 못 버는 근로자도 10.4%에 달했다. 10명중 1명 꼴이다.

200만~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7.3%였고, 300만~4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을 번다는 월급쟁이는 각각 14.9%, 14.8%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44.0%로 가장 높았다. 200만원을 채 못 번다는 비중까지 합하면 80.8%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었다. 100만원 미만인 29.3%였고, 100만~200만원 미만은 48.4%나 됐다. 한 달에 4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 비율은 1.1%로 전 산업중 가장 낮았다.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이었다. 월 400만원 이상 받는 비중이 각각 35.0%, 34.6%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버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9.2%로 월등히 높았다. 30~49세는 4.5%, 50세 이상은 6.7%에 그쳤다.

한편 올해 상반기 특별·광역시 제외한 9개 도내 시 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서귀포시였다. 충남 당진시, 전남 나주시, 제주 제주시, 경북 영천시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시의 산업·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비중이 시 지역 평균인 7.1%보다 높게 나타났다. 5개 시 모두 관리직·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은 시 지역평균(20.6%)보다 낮았다.



수능 필수품 보온병과 도시락 준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정매장에서는 보온 도시락과 보온병을 선보이고 있다. 수능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지금 수험생에게 시험 당일 따뜻한 도시락과 차를 챙겨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음달 12일까지 보온 도시락과 보온병을 30% 할인 판매한다.



'대출 압박'...빚내 집사기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 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나선다. 특히 주택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 DI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을 도입,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전방위 대출 압박으로 정부여당은 가계부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호전장담'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상환능력 심사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추가 대출 어려워져 집단대출 정조준...중도금 한도 5억 이하

내(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I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II를 시행하면 기존 주택대출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존 주택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도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애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간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등 주택집단대출도 정조준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며 "이번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주택대출 규제에만 역점을 뒀을 뿐 가계부채는 못 잡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내놓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 특히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은 거의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교수는 "전체 1400조원 가계부채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560조 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은 4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1000조 정도가 생계형이나, 사업자 대출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역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주택대출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여기에 종사하던 분들의 신규 생계형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 청탁금지법 1년...

기업 83.9% "긍정적" VS 소상공인 70.2% "부정적"

대다수의 기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 및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

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 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

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회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